2007-24 | 책임연구보고서

제15기 한총련의 총노선분석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07-24 | 책임연구보고서

제15기 한총련의 총노선분석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 유 동 열

目　　次

Ⅰ. 머 리 말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 2

Ⅱ. 한총련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 3

1. 한총련의 역사 ····· 3
2. 한총련의 조직체계 ····· 5
3. 분석의 틀 ····· 10

Ⅲ. 제15기 한총련의　총노선 분석 ····· 1

1. 사상노선 ····· 11
2. 투쟁노선 ····· 16
3. 조직노선 ····· 30

Ⅳ. 향후 전망 및 대책 ····· 35

1. 향후 전망 ····· 35
2. 대 책 ····· 42

참고문헌 ····· 52

Ⅰ. 머 리 말

1. 연구목적

국내 최대의 학생운동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2007년 1월 9일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기 한총련 임시집행체계를 출범시키고, 2월 10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임시중앙위원회와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제15기 한총련」을 공식 출범시켰다.

동 대회에서 한총련은 류선민(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후보를 15기 한총련의장으로 선출하고[1],15기 한총련의 활동지침인 '총노선'을 발제하였으며[2] 또한 북한의 2007년 조국통일구호인 3대과업을 그대로 수용하여,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과업 수행의 기수가 되자"라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발제한 제15기 한총련의 총노선을 보면, 한총련은 북한이 2007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조국통일구호인 '3대 과업 실현'(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과 애국운동'과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투쟁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제15기 한총련의 대중투쟁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9기 한총련 이후 자제해왔던 연방제통일의 실현을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등, 이전 한총련의 친북편향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학생운동의 주도세력인 제15기 한총련의

1) 제15기 한총련 재적대의원 336명(총원 1,329명, 사고 993명)중 177명 참석, 투표하여 찬성 170명, 반대 6명, 무효1로 당선됨

2) 제15기 한총련 총노선은 대의원대회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채택하지 못하고, 임시대대에서 추후 채택되었음

활동목표와 과제 등 총노선을 분석하여 한총련의 친북이적성 활동행태를 규명하고 향후 활동방향을 전망하여 이의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안경찰이 한총련의 불법적인 안보위해활동을 차단하고 안보대응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는 제15기 한총련의 총노선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 제시이다. 이를 위해 제15기 한총련의 총노선을 사상노선, 투쟁노선, 조직노선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총련의 향후 활동을 전망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대책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는 연구방법으로 제15기 한총련과 관련되는 제 관련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Documentary Approach)과 한총련의 활동행태를 분석하는 행태적 접근방법(Behavioral Approach)을 병행한다.

Ⅱ. 한총련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 한총련의 연혁[1)]

한총련은 1993년 5월 27일에 고려대학교에서 전국 186개 대학이 참가하여 공식 출범하였다. 그러나 실제 태동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유는 한총련의 전신인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 1987년 8월 19일 충남대에서 결성되었는데, 한총련이 전대협을 직접 계승한 학생단체이기 때문이다.

전대협은 1980년대 친북좌파편향의 학생운동노선을 이어받아 1985년 미문화원 점거사태의 주역인「삼민투」(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 1986년 친북-반미-반정부투쟁의 선도세력인 「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투쟁위원회), 건국대 점거사태의 주역인 「애학투」(전국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투쟁연합) 등의 투쟁성과를 계승하여, 1987년 전국 95개 대학이 가입한 전국적 규모의 학생조직으로 충남대학교에서 출범하였다.

전대협은 제1기를 출범시킨 후 계속 세력을 확산하여 1992년 제6기 때는 출범 당시의 2배에 달하는 전국 183개 대학이 가입할 정도였다. 전대협은 느슨한 협의체 수준의 학생조직에서 벗어나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학생연합체를 결성하기 위해 조직전환을 시도한다. 그

1) 유동열, “12기 한총련의 활동노선 및 전망”, 공안연구 83집』(용인: 공안문제연구소, 2004), 394-41면, 유동열, “11기 한총련의 조직실태와 대응론”, 『공안연구 78집』(용인: 공안문제연구소, 2003), 24-25면, 유동열, 10기 한총련의 노선평가 및 활동전망, 『공안연구 74집』(서울: 공안문제연구소, 2002), 94-95면, 전대협(제1기-제6기) 및 한총련(제1기-3기)에 대한 상세한 연혁은 유동열, 『한국좌익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제』(서울: 민족정론사, 1995) 와 이후 연혁은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이 1993년이후 매년 발간한 『한총련의 실체』(제1기-8기)를 참고.

결과 1993년 3월 30일 경희대에서 개최된 제6기 전대협 대의원총회에서 전대협을 해체하고 강력한 연합체성격의 새로운 학생조직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약칭: 한총련)을 결성키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6년 간의 전대협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93년 5월 27일 고려대에서 전국 186개 대학이 가입한 「한총련」(제1기)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2] 이후 한총련은 정부당국의 사법처리방침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집행부를 출범시키며 2007년에는 「제15기 한총련」 시대를 열고 있다. 한총련은 2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지닌채, 1980년대 이래 명실상부한 한국학생운동의 대표세력으로 군림해 오고 있다.

특히 한총련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무색할 정도로 출범이래 20여년간 일관되게 친북(親北)편향노선을 견지하며 이른바 한국사회변혁을 위해 각종 투쟁을 선도해 왔다.[3]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총련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배출한 이른바 '혁명전사'(활동가)들이 이제 우리사회 각계 각 분야에 진출하여 이른바 '주사파'(일명 민족해방파)라는 친북운동세력을 형성하며 사회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한총련의 조직체계

한총련은 규약 제5조에서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전국 각 대학 총학생회와 전국적인 부문계열조직으로 한다"라고 회원자

2) 한총련은 이전 전대협과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전대협의 활동을 계승,발전시킨 전국규모의 강력한 학생조직인 것이다.

3) 한총련은 스스로 한국사회변혁운동의 주력군과 선봉대의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총련 인터넷 홈페이지(http:/hanchongryun.Jinbo.net)의 소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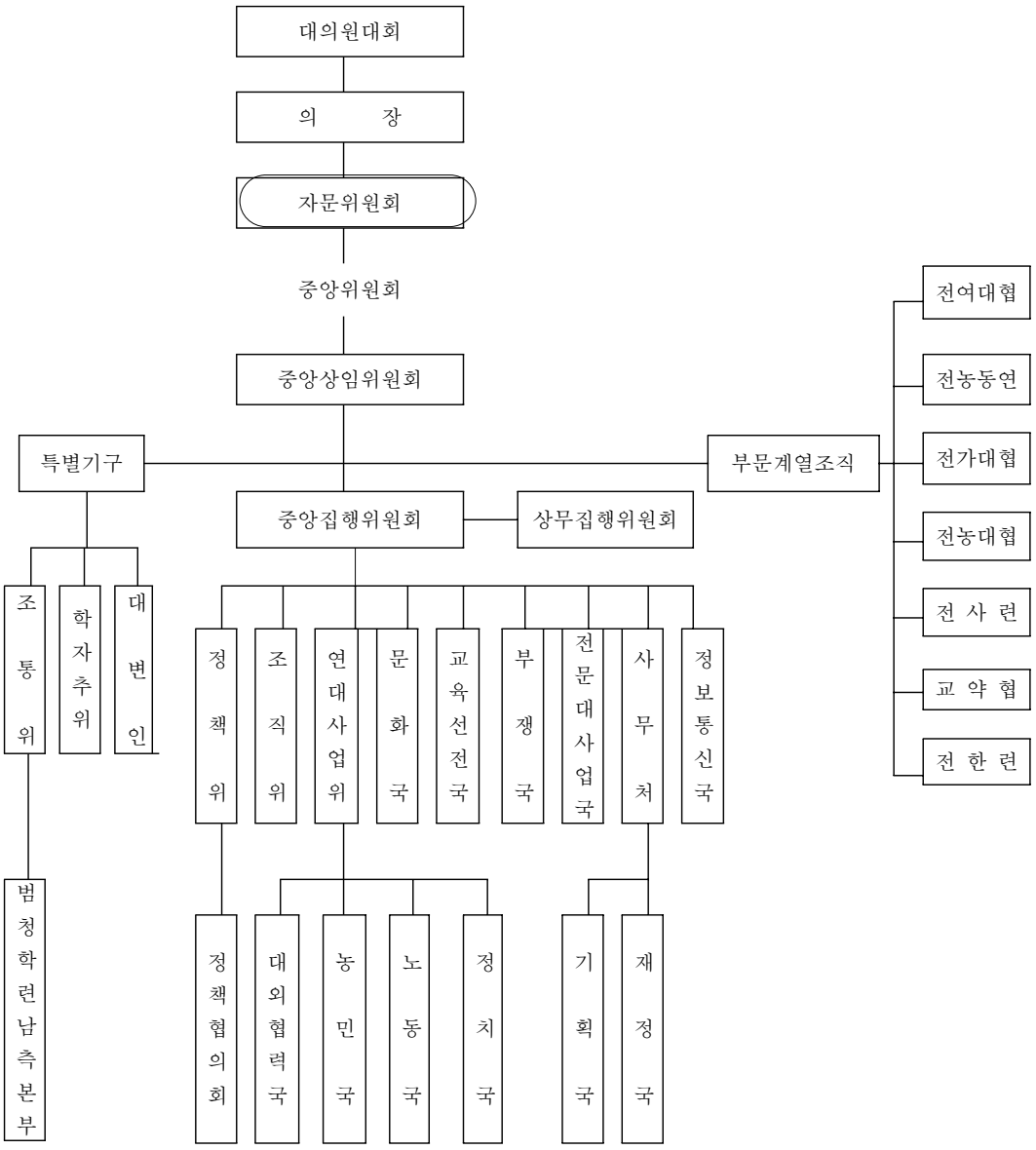
격을 규정하고 있다. 한총련(제15기)은 현재 정확한 가입대학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1996년 한총련 연세대난동사태 이후 당국의 한총련 해체작업에 기인하여 조직규모가 매우 쇠락하였기 때문에 공식화 시킬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한총련은 전국 170여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과 7개 전국부문계열조직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4)]

한총련에 가입한 부문 계열조직으로는 「전여대협」(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전농동연」(전국농대동아리연합회), 「전가대협」(전국가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농대협」(전국농과대대표자협의회), 「전사련」(전국사범대학학생연합), 「교약협」(교육약대협의회), 「전한련」(전국한의과대학생연합회) 등이 있다.

한총련의 조직체계는 크게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누어 진다. 중앙조직을 살펴보면 <도표 1>과 같다.

4) 15기 한총련은 가입대학을 공식 밝히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문대학 외에도 총학생회 단위에서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단과대학 학생회 단위에서 가입한 대학도 포함시킨 통계로 판단된다. 한총련은 제1기(1993년)시 참가교 183개 대학으로 출발하여 제5기(1997)의 경우 206개교가 가입하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였으나, 1996년 한총련 난동사태 이후 1997년부터 가속화된 정부당국의 한총련 사법처리책에 따라 가입학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10기 한총련의 경우 공식적으로 밝힌 가입학교는 180개교(전문대 포함)이며, 11기의 경우 정재욱 의장이 169개 대학이 한총련에 가입했다고 비공식 석상에서 밝힌바 있다.

<도표1 : 한총련의 중앙조직 체계>



첫째, 대의원대회는 규약상 한총련의 최고권력기구이며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의장선출, 강령규약의 제정·개정, 특별기구장 인준, 의장탄핵권, 예결산 심의의결, 총노선 채택 등 사업전반의 심의·인준·의결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의원은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성되는데[5], 15기 한총련의 경우, 총원은 1329명중 사고 993명, 재적 대의원은 336명이다.[6]

둘째, 중앙위원회는 한총련의 상임의사결정기구로, 대의원대회 위임사항이나 대의원대회 미개회시 권한을 대행한다.[7] 15기 한총련의 중앙위원은 총원 143명 사고(미선출, 개별탈퇴) 102명, 재적인원 41명이다.[8] 셋째, 중앙상임위원회(중상)는 상설의결기구로 한총련의 전체활동을 관장하고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지도하는 실질적인 권한행사 기구이다.[9] 넷째, 특별기구로는 「조국통일위원회」(조통위),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추위), 「대변인」등과 15기 대의원대회에서 한시적으로 결성한 「한총련 투쟁본부」등이 있다. 특

5) 당연직 대의원은 ①한총련 의장, 중앙상임위원, 지역지구 중앙위원 ②한총련 가입대학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총여학생회장, 총예비역협의회장 ③부문계열조직 대의원 등으로 구성되고, 선출직 대의원은 지역,지구단위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각 학교별 재학생 5,000명당 1명으로 비례선출한다. 한총련 시행세칙1(대의원선출) 참고.

6) 한총련의 대의원은 매 기수별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가입대학 수와 대의원자격 관련 규정 등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예를 들면, 7기(206대학) 1,658명, 8기(178대학) 재적대의원 781명, 9기(176대학) 재적대의원 618명, 10기(180대학) 전반기 재적대의원 890명, 하반기 779명, 11기(170교)는 전반기 재적대의원 830명, 하반기 755명, 12기는 1383명(재적대의원 622명), 13기는 1307명(재적대의원 564명), 14기는 1359명(사고 929명, 재적 대의원 430명) 등이다.

7) 중앙위원은 한총련의장, 중앙상임위원, 상무집행위원, 각 지역지구 중앙위원, 부문계열의 전국조직대표 등으로 구성되는데, 14기 한총련 중앙위원 총원은 147명이나 제적 중앙위원은 50명이다.(사고자 97명), 제14기 한총련, 14기 한총련 4차 임시중앙위원회 성사보고(2006.6.24)

8) 15기 한총련 임시중앙위원회보고(2007.2.10)

9) 중앙상임위원은 13명으로 한총련의장, 8개 지역총련의장, 특별지구(제총협)의장, 특별기구장(3)이다.

히 「조통위」는 이른바 통일투쟁을 전담하는 부서로 직접 「범청학련 남측본부」와 연계되어 이른바 조국통일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외, 한총련의 실질적인 핵심집행기구인 정책위, 중앙집행위(중집)와 상무집행위(상집)를 주목해야 한다. 정책위는 한총련의 정책과 노선을 연구생산하는 핵심부서로 한총련의 원로원격인 상급기구인데 실제 '주사파학생운동의 지하 핵심지도부'로 구성되어, 중앙집행위와 상무집행위에 자파 핵심인자를 포진시켜며 한총련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10] 중앙집행위는 한총련의 정책을 집행하는 상설부서로 긴급사안 발생시 의결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11], 상무집행위는 정책집행의 보좌기구[12]로 한총련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부서이다. 한총련은 11기 하반기 대의원대회시 중앙집행위 산하에 정치국을 신설한바 있다.

한총련의 지방조직은 전국단위체계(한총련)·지역단위체계(지역총련)·지구단위체계(지구총련)·총학생회체계·단대학생회체계·과학생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총련 산하에 8개 지역, 1개 특별지구 및 25개 지구를 두고 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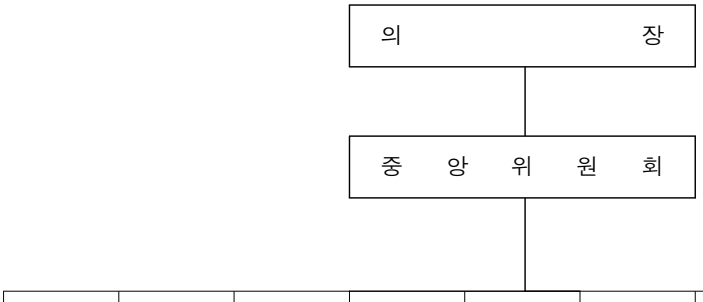
10) 제9기 한총련 시기에 혁신파(新자주파)가 자주파를 비판하며 한총련내 비선분파(秘線分派)의 패해를 지적했는데, 바로 한총련을 좌지우지하는 원로원격인 정책위를 지칭한 것이다. 정책위의 구성은 철저히 보안에 부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11) 중앙집행위원은 14명으로 한총련의장, 중앙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연대사업위원장, 사무처장, 문화국장, 교육선전국장, 정보통신국장, 학자추정책위원장, 대변인 정책실장, 조통위정책위원장, 투쟁국장, 전문대사업국장 등이다.

12) 상무중앙집행위원은 6명으로 한총련 의장, 집행위원장,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연사위원장, 사무처장 등이다.

13) 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2006.2.10), 7-8면

<도표 2 : 한총련의 지방조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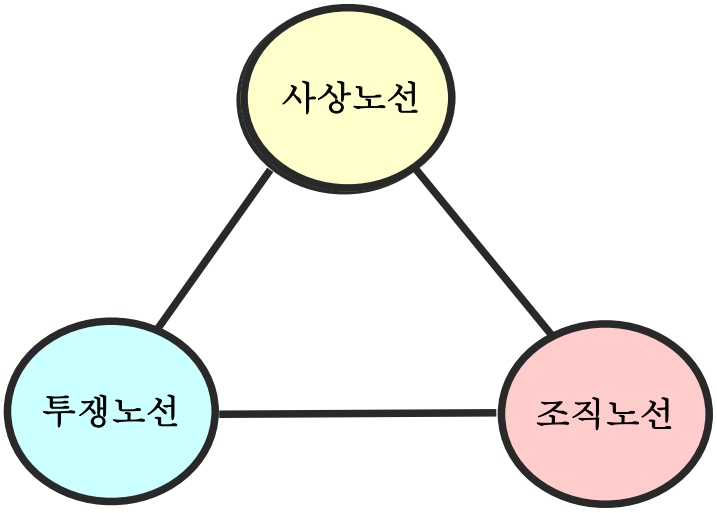
서울지역	경기·인천 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북지역	광주·전남 지역	대구·경북 지역	부산·경남 지역	제주지역
(서총련)	**(경인총련)**	**(강총련)**	**(충청총련)**	**(전북총련)**	**(남총련)**	**(대경총련)**	**(부경총련)**	**(제총협)**
동부지구 **(동총련)**	인천부천 지구 **(인부총련)**	원주지구	대전지구 **(대전총련)**	단일지구	광주지구 **(광 총 협)**	단일지구	부산동구 **(동부총협)**	특별지구
서부지구 **(서부총련)**	경기남부 지구 **(경남총련)**	춘천지구	충남지구 **(충남총련)**		여순지구 **(여순총협)**		부산서구 **(서구총협)**	
남부지구 **(서남총련)**	경기동부 지구 **(동부총련)**	영동지구	충북지구 **(충북총련)**		목포지구 **(목 총 협)**		마창지구 **(마창총협)**	
					광전대협		서부경남 지구 **(서경총련)**	
북부지구 **(북부총련)**							부울전협	

3. 분석의 틀

제15기 한총련의 총노선에 대한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한총련의 총노선이란 1년 동안 한총련의 활동목표와 방향, 영역별 세부투쟁과제 및 활동 로드맵 등을 제시하고 있는 한총련의 총체적인 투쟁지침인 것이다. 따라서 15기 총노선에 대한 분석은 한총련 활동의 3대 요소로 할 수 있는 ① 사상노선 ② 투쟁노선 ③ 조직노선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째, 사상노선이란 한총련의 조직이념을 포함하고 있어 한총련의 조직성격을 밝히는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투쟁노선은 한총련의 투쟁성 즉 투쟁방향과 과제 등 활동행태를 가늠할 수 있다. 셋째, 조직노선은 한총련의 조직운영원리와 북한과의 연계성 등을 입증시켜 주는 요소이다. 이러한 총노선의 분석을 통해 한총련의 실체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한총련의 활동을 전망하며 이에 대한 실천적 대책을 모색한다.

<도표3> 분석의 틀



Ⅲ. 제15기 한총련의 총노선 분석

1. 사상노선

1) 주체사상을 조직이념으로 설정

제15기 한총련의 활동노선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총련의 지도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한총련은 북한의 통치이념이며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조직의 지도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15기 한총련은 제11기 한총련이 개정한 강령규약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는데, 첫째, 강령[14]과 각종발간물을 통해 '민중중심·학우중심의 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둘째, 한총련의 각종 발간물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수용하여 대중중심의 투쟁과 자주성, 창조성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체사상을 수용하고 있다.

<도표4> 한총련의 주체사상 지향성 (강령전문 중)

1기-8기	한총련은 **민중중심·학우중심·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청년학생들의 자주적인 대중조직이다
9기-11기	한총련은 **민중중심·학우중심·단결의 사상**을 바탕으로 애국의 길을 가는 한국 대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12기-15기	한총련은 자랑스런 한국학생운동의 1백년 역사를 계승한 **한국대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2003년 하반기 대의원대회 개정안)

14) 15기 한총련은 현재 11기 한총련시 수정한 강령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15기 한총련 임시 대의원대회 자료집(2006.2), 6-25면 참조

한총련이 지도사상으로 내세운 '민중중심, 학우중심의 사상'이란 바로 '사람중심·인민대중 중심의 사상'이라고 상징되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원용한 것이다.[15] 한총련은 공개발간물에서 지도사상을 직접 주체사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한총련에 대한 사법처리를 회피하기 위한 전술적 술책이다. 특히 학생운동권 내에서 한총련이 주체사상을 추종한다는 것은 상식이며, 실제 타 계파에서 한총련을 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 추종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이는 한총련이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이념을 배척하고 북한의 통치이념인 주체사상을 수용하여 실천하는 조직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한총련의 친북편향의 행태는 한총련을 지도하고 있는 기본이념 즉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한 조직의 사상은 그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기본적 가치체계이며, 사상이 있어야 이른바 목적의식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한총련이 지도사상인 주체사상 관점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행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16]

2) 민중민주주의 실현 표방

한총련은 강령 전문에서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즉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통상 좌파권에서 지칭하는 민중민주주의란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과도체제인 '인민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한총련은 '인민'(people's)을 '민중'(people's)으로 용어만 바꾸어 민중민주주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15)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규정한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체사상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라고 호칭하며 이를 사람중심,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6) 한총련의 주도세력인 민족해방(NL)계열이 지난 20여 년간 갖은 위기국면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의 주도세력으로 장기집권하는 이유는 바로 사상적 토대가 굳건하기 때문이다.

<도표5> 한총련의 민중민주주의지향성(강령전문 중)

1기-8기	한총련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며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9기-11기	한총련은 일제 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12기-15기	한총련은 외세의 부당한 지배와 간섭에 맞서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2003년 하반기 대의원대회 개정안 중)

이는 결국 한총련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중민주주의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주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3) '3대 과업' 수행을 한총련 운동의 기본목표로 설정

15기 한총련은 북한의 2007년 통일운동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올해 대중운동의 기본목표로 "우리민족끼리 기치 높이 우리민족의 승리에 대한 낙관으로 무장하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과업을 실현하여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열어 나가자"로 정하고, 한총련이 3대 과업실현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며 이른바 '3대 과업'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온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중략...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업수행**에 한결같이 떨쳐 나섬으로써 자주통일 위업의 전성기를 펼쳐나가야 할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 올해 우리민족은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이라는 3대과업을 수행하여 이러한 미제와 수구세력의 발악을 분쇄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6.15 통일시대의 흐름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중략... **올해 청년학생의 임무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과업 수행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중략... 3대 과업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전 민족적으로 벌여나가자는 것이니만큼 일꾼들만이 기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학생들이 3대 과업 수행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수행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들고 기수로서 그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 나갑시다”(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2007.2.10, 38-39면)

“ 반미반외세 대결전의 해, 반전평화수호의 해, 민족대단합 투쟁의 해, 2007년! 민족의 진군길에 승리의 연대를 수놓아 온 그대, 한/총/련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실현의 기수되어 1만이 결집하는 한국대학생축전 성사로 학생운동 활성화의 새 전기를 열어내고, 반미반전 평화수호 반한나라당 투쟁으로 총진격! 대중적인 6.15 공동선언 지지이행으로 대선투쟁을 승리로 결속짓고,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제15기 한총련, 5-6월 집행계획, 1면)

“ 2007년 자주통일 운동의 구호로 제시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라는 기치를 실현하기 위해 3대 과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되새기며, 3대과업 수행의 기수가 되기

> 위해서는 어떤 안목과 포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 주체가 되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리며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중략...올해 우리 민족의 목표는 3대과업을 수행하여 미제와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수고 전 민족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그 결실로 한나라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기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15기 한총련, 3-4월 사업계획서, 1면-4면)

한총련은 매년 북한이 1월 1일 신년공동사설과 1월말 개최되는 '정권-정당-단체 연합(합동)회의'에서 채택한 조국통일운동의 구호를 그대로 수용하여 '통일투쟁지침'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10기 한총련은 2002년 북한이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자주통일 구호로 설정한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를 그대로 수용하여 통일구호로 설정한바 있고, 11기 한총련은 북한이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자주통일운동의 구호로 설정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를 그대로 수용하여 통일구호로 설정한바 있고, 12기 한총련은 북한이 2004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조국통일구호로 채택한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높이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자"를 통일구호로 설정하였고, 13기 한총련는 2005년 북한이 통일운동 구호로 내세운 "3대 민족공조(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공조")를 그대로 수용하여 통일구호로 설정한바 있다.

<도표6> 북한의 조국통일구호와 한총련의 통일구호

	북 한	한 총 련	
	신년공동사설 (매년 1월1일)	한총련 대의원대회자료집 (매년 총노선 발표시)	
2002년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우리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10기 한총련
2003년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11기
2004년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높이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자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 높이 민족공조로 자주통일의 활로를 개척하자	12기
2005년	3대 민족공조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3대 민족공조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13기
2006년	3대 애국운동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 (자주통일,반전평화,민족대단합)	14기
2007년	3대 과업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15기

2. 투쟁노선

1) 자주·민주·통일노선 명시

한총련은 강령1-3항과 규약 2조에서 자주·민주·통일노선(일명 자민통노선)의 실현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

민주·통일노선(일명 자민통노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또한 한총련은 2007년 활동방향과 목표 및 과제를 밝힌 투쟁지침서격인 《15기 한총련 총노선》 등에서 일관되게 자민통(자주-민주-통일)의 실현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강령1항은 미국 등 모든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을 막아내고 민족자주권의 회복을 통해 조국의 자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자주= 반미(반외세)자주화' 노선을 수용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정치,군사,경제,문화적 지배와 간섭을 막아내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강령1항)

둘째, 강령2항은 비민주적 요소의 척결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민주=반파쇼(독재)민주화'노선을 수용하여 사회민주화투쟁으로 포장한 것이다.

"국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가로막는 모든 비민주적인 요소를 없애고 민중이 사회의 주인이 되는 전면적인 민주개혁으로 사회의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한다"(강령2항)

셋째, 강령3항은 북한의 통일 3원칙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통일=조국통일'노선을 수용하는 것이다.

여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한의 통일 3원칙인데(대한민국의 통일3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임), 이 원칙은 한총련이 지적한 것처럼 '7.4공동성명'에서 우리정부가 합의해준 바 있으나 문제는 각 원칙을 해석하는 관점이 남북한간에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한총련은 각종 발간물에서 동 원칙을 북한측 시각에서 해석하고 있

다.

또한 이 조항은 한총련의 강령에 명시된 이전의 연방제통일 부분을 삭제하고 남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내세우고 있어 직접 문제삼기 어려우나 한총련의 타 자료에서 연방제통일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도표7> 한총련 통일강령의 변화

	한총련의 통일강령(강령3항)	
1기-8기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연방제 명시
9기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2000년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한다"	**연방제 삭제**
10-15기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범민족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연방제 삭제

한총련은 위 도표에서 보듯이 강령 3항의 통일강령 부분을 개정하고 있다. 제1기-8기까지 강령에서는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라고 연방제 통일 강령을 명시하였으나, 9기에는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

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일강령으로 틀어쥐고 2000년 가까운 앞날에 조국을 통일한다"라고 개정하면서 연방제통일강령을 삭제하였다. 또한 2003년 하반기 강령개정안에서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범민족적 통일국가를 수립한다"라고 명시하여 연방제강령을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한총련은 강령에서만 '연방제 통일'부분을 삭제했을 뿐, 여전히 한총련 명의의 각종 발간물에서 연방제통일을 주장하고 있는바, 한총련이 연방제통일노선을 폐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9기-13기 때에는 의도적으로 연방제 통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었으나, 14기부터는 노골적으로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볼때, 한총련 강령에서 연방제통일부분을 삭제한 것은 한총련의 합법화와 관련하여 한총련의 이적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전술적 술책으로 판단된다.

넷째, 한총련은 규약 제2조(성격)에서 동 조직이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는 조직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10기 한총련의 규약수정시 신설된 것이다.

> "한총련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조직적 성과를 기반으로 변화발전하는 민족민중과 한국대학생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실현하고 학생회를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로 꽃피우기 위한 전국적 조직이다"(한총련 규약 제2조)

> "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투쟁중심주의로 무장해야 한다. ① "학우대중과 민족민중에 대한 사랑과 책임성, 자기단위 자기초소 운동에 대한 높은 책임성, **한총련과 자주민주통일 운동**에 대한 높은 책임성"은 다른 모든 것을 추동시키고 발전시키는 결정적 힘입니다"(제15기 한총련, 총노선(초안), 31면)

다섯째, 한총련은 올해 활동방향과 목표 및 과제를 공개적으로 밝힌 투쟁지침서인 《15기 한총련 총노선》과 《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및 각 공식문건 등에서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총적과제로 설정하고, 영역별 투쟁과제로 ①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 ② 반수구,반한나라당투쟁 ③ 조국통일,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 ④ 교육투쟁 ⑤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 ⑥ 민중연대사업 등 6대 투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7]

이중 ①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자주)의 일환이며, ② 반수구-반한나라당투쟁(반보수투쟁) ⑤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은 반파쇼민주화투쟁(민주)의 일환이고, ③ 조국통일,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은 통일투쟁으로 일환으로 결국 북한의 이른바 자민통(자주-민주-통일)투쟁노선을 수용한 것이다.[18]

이상과 같이, 한총련이 강령 1-3항과 규약 2조 및 총노선 등에서 자주, 민주, 통일노선의 실현을 주장한 것은 1970년 제5차 조선로동당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남투쟁과제인 자주, 민주, 통일노선에 입각한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투쟁, 조국통일투쟁 등 3대 투쟁목표를 여과없이 수용한 것이다. 다만 3항의 통일부분에서는 연방제통일과 관련한 한총련의 이적성 시비 일소를 위해 '연방제통일'을 '6.15 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통일'로 바꾼데 불과한 것으로, 결국 북한노선을 수용 동

17) 한총련 제13기(2005년)에는 자민통(자주-민주-통일)운동을 총적과제로 설정하고, 영역별 투쟁과제로 ① 반미반전운동 ② 615공동선언 이행/ 수구보수 반통일세력 퇴출 ③ 한총련 합법화,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④ 학원자주화 운동 ⑤ 청년실업문제 해결⑥ 민중연대운동 등 6대 투쟁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또한 14기 한총련은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수행을 총적과제로 설정하고, 영역별 투쟁과제로 ①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 ② 반보수투쟁 ③ 조국통일투쟁 ④ 한총련 합법화투쟁 ⑤ 지방선거 대응투쟁⑥ 학자 공연투쟁(학원자주화공동연대투쟁) 등 6대 투쟁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18) 제15기 한총련,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47-56면.

조하여 한총련의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 지지

한총련은 9기 한총련 이래 강령에서 연방제통일 부분을 삭제하면서 이른바 친북이적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량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10기-13기까지 한총련은 의도적으로 연방제통일 부분을 숨겨왔으나,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지지, 선전해왔다. 그러나 14기 한총련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노골적으로 연방제통일 조국건설이 한총련의 당면 목표임을 표방하고, 연방제통일투쟁지지, 관철에 매진하고 있다. 15기 한총련에서는 올해 '낮은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자며 독려하고 있다.

첫째, 15기 한총련은 총노선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낮은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14기 한총련에서 이미 한총련이 '연방통일 조국건설'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며, 2008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목표로 투쟁할 것을 천명한데 이은 조치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남북연합안)을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은 정당화하고 지지선전하는 것이다.

> " 제15기 한총련 대중노선 1.총적방향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반미반전,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을 대중적으로 펼쳐내고 반보수대연합 형성으로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6.15 공동선언 이행에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하여 **낮은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하자!"(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40-41면)

> "2006년 정세는 학생운동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전 민족은 2005년 마련한 승리의 기초 위에서 2006년 전면적 공세에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기치 아래 단결한 우리 민족은 분단 60년이 된 지난해를 자주통일의 새로운 단계를 연 역사적 해로 빛냈다...중략... 올해 우리 민족은 이 새로운

단계를 더욱 활력있게 전진시켜 2007년과 2008년으로 이어지는 자주통일의 결정적 시기를 승리로 결속지어야 한다....중략... **모든 것을 연방통일 조국 건설을 위해! 자주통일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이자!** ...중략... 따라서 우리는 자주통일이라는 원대한 포부와 신심을 안고 '**모든 것을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올해 시작하는 이 전면적 공세는 2007년, 2008년 자주통일, **연방통일조국**이 건설될 때까지 전개될 것이며 3년의 전망을 가지고 이 해의 운동을 기획할 때 올해는 승리의 확고한 토대를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4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 자료집, 2006.2, 45-46면)

둘째, 한총련은 《통일일꾼수련회 자료집》(2006.8)의 '조국통일이론' 편을 통해 북한의 통일방침을 집약한 '조국통일 3대헌장'(①조국통일 3대원칙 ②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③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의 유일한 초석이며 헌장이라고 지지, 찬양하며,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선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일노선을 정면 부정하고,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20]을 고무, 찬양하는 주장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국통일을 위해 노력함에 있어 반드시 지키고 의거해야 할 통일의 헌장은 무엇인가?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연방제 통일방안**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대헌장**이다..중략.. 조국통일3대헌장은 통일투쟁과정에서 이룩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인과 방도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과학적

19) 조국통일 3대헌장이란 용어는 김정일이 1996년 11월 24일 판문점 방문시 최초로 사용했으며, 1997년 1월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공식 사용되었고, 그후 김정일이 1997년 8월 4일 발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일명 8.4노작)라는 논문 속에서 이를 체계화한바 있다. 북한은 김일성이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을 김정일이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8.4), 7면

20) 유동열, "북한 김정일의 통일노선해부", 2003년 공안문제연구소 특수연구보고서(2003)

이론이다 ... 따라서 3대 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또한 남북화해와 전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15기 한총련, "조국통일이론", 통일일꾼수련회자료집, 2006.8, 2-4면)

셋째, 북한이 2007년 1월 1일 발표한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구호로 설정한 ""올해 온겨레는 **《민족중시, 평화수호,단합실현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여 나가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한총련의 통일구호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대남통일노선을 정당화하고 고무,선전하는 것이다.

" **올해 청년학생의 임무는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과업 수행의 기수가 되는 것입니다**...중략... 3대 과업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전 민족적으로 벌여나가자는 것이니만큼 일꾼들만이 기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청년학생들이 3대 과업 수행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3대 과업 수행으로 6.15 통일시대를 빛내어 나가자'라는 구호를 들고 기수**로서 그 임무와 역할을 다하여 나갑시다"(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집, 2007.2.10, 38-39면)

셋째, 한총련이 상급조직으로 받들고 있는「범청학련」(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의 강령과 규약에서 연방제통일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북한의 통일방침인 '조국통일 3대헌장'을 조국통일강령으로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총련은 범청학련의 남한지역 조직인「범청학련 남측본부」의 구성체[21]라는 점으로 볼 때, 한총련이 연방제통일 강령을 수용, 승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중 하나인 '통일전선부'가 조종하는 친북반한 통일전선체로 1992년 8월 15일 결성완료하였는데, 북측본부(조선학생위, 청년동맹), 남측본부(한총련), 해외본부와 공동사무국으로 구성되어있다.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134-141면

"강령1. **조국통일 3대헌장의 정신이 구현**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범청학련의 통일운동 강령으로 틀어쥐고 200년대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중략... 규약 제1조 범청학련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범청학련의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남과 북(북과 남),해외의 각계각층의 학생조직 및 청년조직을 망라하는 전민족적인 청년학생통일운동연합이다 ...중략... 제3조 범청학련은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강령, 연방통일국가창립방안의 조국통일 3대헌장을 지침**으로 삼는다..."(범청학련 강령과 규약)

"**범청학련**은 북의 조선학생위원회,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해외의 청년조직과 학생, **남의 한총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한총련으로 구성**되어 조국통일투쟁에서 온몸을 내던지며 조국통일투쟁을 가장 앞서서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10기 한총련, 2002년 한총련 조국통일운동 방향에 대하여, 13면)

3) 북한의 대남노선 수용 동조

한총련은 15기 총노선과 각종 간행물에서 일관되게 북한의 대남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투쟁과제로 설정하고 이의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특히 이들 주장은 단순히 구호만 일치하는게 아니라 전개논리가 북한과 일치하고 있다.

15기 한총련은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수행을 총적 과제로 설정하고, 영역별 투쟁과제로 영역별 투쟁과제로 ①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 ② 반수구,반한나라당투쟁 ③ 조국통일,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 ④ 교육투쟁 ⑤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⑥ 민중연대사업 등 6대 투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22)]

첫째,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의 핵심과제는 대북제재중단 등 대북적대정책철회투쟁, 반미반전평화수호투쟁,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한미FTA저지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 등이다. 이는 북한의 반미자주화투쟁(자주)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 1> **반미반전,미군철수투쟁** ① 목표와 방향 - **반미자주화 투쟁을 대중적이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6.15 시대에 대중들의 반미의식은 비할 바 없이 높아졌습니다. 정세가 발전하여 사회적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큰 의제로 떠오르게 되었을 때 대중들이 미국의 편이 아니라 민족의 입장에서 '미국은 필요없다' 는 여론이 범국민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대북제재 중단 등 대북적대정책 철회 투쟁을 벌여냄으로서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여야 합니다. 미국은 대화에 임하면서도 자신의 패권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더욱 더 극심한 전쟁책동을 벌일 것입니다. 전 민족의 힘으로 반미반전평화수호 투쟁을 펼쳐내는 것은 당면하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키고 조국통일을 만들어 가는데서 사활적인 과제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를 향한 전쟁 연습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려내면서 평화수호 투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 한-미 FTA 저지 투쟁**을 반미투쟁으로 잘 만들어 내면서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등의 미국의 행태를 제 때 폭로하는 투쟁을 잘 펼쳐내는 것과 함께 5.18, 故심미선·신효순 5주기 등 주요계기를 잘 살려서 투쟁하도록 합시다. - **반미 투쟁이 주한미군철수 투쟁으로 상승**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갑시다"(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49면)

---

22) 14기 한총련은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수행을 총적과제로 설정하고, 영역별 투쟁과제로 ①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 ② 반보수투쟁 ③ 조국통일투쟁 ④ 한총련 합법화투쟁 ⑤ 지방선거 대응투쟁⑥ 학자 공연투쟁(학원자주화공동연대투쟁) 등 6대 투쟁과제를 제시한바 있다.

둘째, 반수구, 반한나라당투쟁의 핵심기조는 ① 보수세력 및 한나라당의 대선집권기도 파탄투쟁 ② 뉴라이트책동 분쇄 등이다. 또한 반보수대연합(진보개혁 평화세력)을 결성하여 보수대연합을 분쇄하자고 선동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반파쇼민주화투쟁(민주)을 수용한 것인데, 우리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핵심수호 세력인 보수안보세력을 반평화세력, 반민족세력 등으로 매도하여, 무력화시켜 그들이 의도하는 한국사회변혁을 달성하려는 의도이다. 반보수투쟁은 북한이 2006년과 2007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반보수대연합'결성을 지령한바 있는데, 이를 수용한 것이다.

" - 연중 지속적인 **반수구, 반한나라당 투쟁**을 벌여나가 **대선집권기도를 파탄**내도록 합시다. - **뉴라이트의 책동**을 제 때 폭로하고 학내 진보개혁적 담론을 형성하여 뉴라이트가 대학가에서 뿌리내리려는 책동을 분쇄하도록 합시다. - 한나라당의 본질에 대해 알려나가고 사건이 터질 때 제대로 여론화하면서 한나라당이 실제 대중들 속에서 해체 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펼쳐냅시다.- 6월 항쟁 20주년 등의 계기를 살려 한나라당의 전신인 독재정권들이 행했던 만행들에 대해 낱낱이 알려 나갑시다"(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52면)

세째, 조국통일, 6.15 공동선언이행투쟁의 핵심과제로 민족자주와 대단합운동과 6.15 공동위원회 강화 등을 내세우고 주요 사업으로 ① 6.15 기념일 제정운동 ② 6.15 민족통일대축전 성사 ③ 8.15 대회 ④ 아리랑.세계청소년 축구대회 응원 등을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조국통일운동이란 미명 하야 친북통일전선체를 구축,강화하려는 의도이며, 한총련는 이를 통해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확산시키려는 기반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 민족자주의 대를 세우고 민족대단합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광범위하게 만

들어 가야 합니다. - 광범위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공동선언 이행 운동을 펼쳐내야 합니다.- 6.15 공동위원회를 강화하는데 청년학생이 앞장서도록 합시다"(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53-54면)

특히 6.15 민족공동위의 강화와 6월 15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는 사업은 북한이 2006년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조한 내용과 2006년 1월 26일 '북한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시 발표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고무,동조,선전하는 것이다. 북한은 동 대회에서 "우리민족끼리 시대의 새로운 전민족통일련대조직인《6.15 민족공동위원회》를 더욱 확대 강화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나감으로써 통일애국역량의 련대를 강화하고 온 민족의 애국적 통일열의를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할것이다"(조선중앙통신, 2006년 1월 26일자 보도)라고 밝힌바 있다.

또한 북한은 2006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 6월 15일을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성대하게 기념하는 것을 전통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6.15 기념일 제정을 선동한바 있다.

넷째, 교육투쟁의 목표로 등록금문제 해결, 신자유주의교육정책 저지, 올바른 교육철학을 가진 대통령 당선 등을 내세우고, 주요 사업으로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결성(2.2), 전국대학생 2차-4차 공동행동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학원자주화투쟁의 일환으로 한총련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중투쟁전술이다.

다섯째,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은 한총련의 활동을 합법화하고, 이의 법적 제제수단인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는 전술의 일환으로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수용,동조하는 투쟁이다.

" 5>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투쟁** ① 목표와 방향 - 국가보안

법을 휘두르는 공안세력들의 책동을 제 때 폭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와 잘 연계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을 벌여내도록 합시다. - 이적규정이 실제 철회될 수 있도록 꾸준히 투쟁을 벌여나가도록 합시다" (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56면)

"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하고 친미보수세력 척결하여 6.15 통일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중략...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파쇼 독재냐 진보개혁이냐, 전쟁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를 가르는 중요한 투쟁이다. 한총련은 광범위한 대중들의 힘으로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올해 대선에서 반통일 친미사대매국정당인 한나라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 6.15 통일시대를 고수하고 새 역사, 새 사회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벌일 것이다. "(15기 한총련 임시 중앙위원회 특별 결의문, 2007.3.10)

여섯째, 민중연대사업으로 '6월 항쟁 20주년 기념사업'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외 한총련이 북한의 대남선동노선을 수용한 대표적 사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한국을 미국에 종속된 식민지사회로 간주하고 미국의 식민지통치 파열 주장
- 현정부를 사대매국, 친미예속정권으로 간주
- 주한미군 철수, 반미반전 평화투쟁
- 미국의 새전쟁책동, 핵전쟁책동 분쇄, 대북강경정책 분쇄
- 조미 불가침조약 체결, 북한의 동시행동 일괄타결안 수용
-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평택미군기지 이전반대투쟁, 덕수궁터 미대사관 건립반대운동, 한미FTA반대투쟁
- 외세공조 배격, 민족공조 성사
- 우리민족제일주의 주장

- 3대 민족공조, 3대 애국운동, 3대과업 수행 선동
-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범민련-범청학련 이적규정 철회, 주적론 철회
- 수구보수 반통일세력 척결, 한나라당 해체투쟁, 국정원-보안수사대 해체
- 북한 미사일발사, 핵실험 지지

4) 북한의 선군혁명노선 정당화 및 선전

한총련은 북한의 선군정치(先軍政治)가 '민족방어의 전쟁억제력'이라 미화하며, 청년학생들에게 북한의 선군정치를 바로 알리기 위해 학술토론회 및 연구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제14기 한총련도 선군노선이 미국의 한반도 전쟁책동을 막아주며 더나가 우리민족의 운명을 지켜준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북한의 선군노선과 6.15 민족세력이 공조하여 미제와 친미세력을 앞도하고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할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명백히 북한 김정일의 선군혁명노선을 정당화하고 미화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 " 지금 미군철수투쟁의 선봉에는 청년학생이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중략... 2.13합의로 **북의 선군위력이 과시**되고 북미관계, 남북관계에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에서도 미국에 할 말을 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정상회담 분위기가 고조되면 정계를 시작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이 솟구치고 조국통일에서 민족번영의 길을 찾으려는 요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통일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미국과 대립각을 형성하게 되어있고 주한미군은 평화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제5기 한총련 의장토론문, 4면)

> " 북에는 핵무기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과 위력적인 최첨단 탄두들이 존재(북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일컫는 김명철

북미평화센타 소장의 발언)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북이 선군정치로 이룩한 민족방어의 전쟁억제력**의 높이이다. 미국은 20세기에 미·소 군사 냉전시대를 자신의 승리로 이끌어 왔었다고 자신하였지만 **선군혁명을 수행하**는 북의 주도하에 열린 21세기는 미국의 패배로 종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중략... 북은 올해 경제발전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달성하겠다는 경제강국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역시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봉쇄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하고 북의 잠재력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오늘, 선군정치를 토대로** 한 북한경제의 비약적 발전은 당연한 결과로 될 것이다. 북에 석유가 매장되어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경제침체로 허덕이는 우리 국민들은 북과의 경제협력을 크게 환영하게 될 것이다. ② 이북바로알기 차원의 선군바로알기 사업을 강화한다 ...중략... **선군문답 등 선군정치를 바로 알리기 위한 학술토론회 및 연구사업**을 확산한다. 7월, 한국진보연대 한국사회포럼에 즈음하여 '전국청년학생 선군정치 토론회 개최' -> 각 급 청년학생 단위의 학술부와 학회, 동아리를 발동하여 연구발표를 준비하여 이북바로 알기-**선군**에 대한 청년학생들의 학술활동을 분출시킬 수 있도록 한다"(16기 범청학련 총노선, 2007.5. 2-8면)

3. 조직노선

1) 민주집중제의 조직원리 채택

한총련은 역대 대의원대회자료집에서 '민주주의 중앙집중제에 의한 한총련 조직운영'을 표방하며, 조직운영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23] 이는 러시아공산혁명가인 레닌이 창안한 공산당 조직의 조직운영원리인 '민주주의중앙집권제의 원칙'(일명 민주집중제)를 수용한 것으로 이 원

23) "민주집중적 조직운영과 일꾼들이 사업작풍 방법 우리한총련 정신대로 단결실현하기 위한 노력, 한총련 대의체계에서 민주적 운영과 민주집중제 구현의 노력이 소중한 성과를 가져왔다."(11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자료집, 27-28면)

칙은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5조, 북한 조선로동당 규약 제11조에도 명시된 원칙인 바, 결국 한총련이 북한당국의 조직운영원칙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4기 한총련부터는 민주집중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북한 조선노동당의 조직운영원리를 수용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이를 삭제한채 규약4조(조직운영원칙)에 민주집중제의 내용을 풀어서 명시하고 있다. 이는 15기 한총련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조(조직운영원칙) … 2) 본회는 구성원의 자주적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결정집행하며 그 결정된 방침을 모두가 하나로 **통일단결**하여 실현한다"(한총련 규약4조 2항)

2) 한총련의 배후조직 : 조선로동당

한총련은 스스로를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기본대오라고 하며, 자신의 상급조직이「범청학련」(조국통일범청년학생연합)임을 밝히고 있다. 실제「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단을 보면, 의장 윤기진(7기 한총련 의장), 상임부의장 류선민(15기 한총련 의장)이며, 부의장단도 한총련의 지역총련 의장들과 조통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24]

"범청학련 운동의 핵심주체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남측본부의 기본대오는 한총련**입니다. 96년 연대항쟁과 97년 범민족대회. 10년의 험난한 투쟁속에서 전대협과 한총련은 범청학련에서 자기의 역할을 백배,천배로 수행해왔습니다. 조직의 확대, 강화의 핵심주체도 역시나 한총련입니다"(10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자료집, 88면)

24) 한총련은 1994년 4월 개최된 '제2기 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범청학련의 남측본부로서 범청학련은 한총련의 상급조직"임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이미 1993년 2월 28일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93도 1730)난 바 있다.

그런데, 범청학련은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과 함께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소속의 대남공작부서중 하나인 「통일전선부」의 조종을 받는 산하기관인바, 한총련의 상급조직이자 배후는 바로 북한의 「조선로동당」임을 알 수 있다.[25]

또한 북한이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인터넷 구국전선(한민전 홈페이지) 등을 동원하여, 매번 한총련의 활동을 정당화하며 독려하고 한총련의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각종 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있는 것은 한총련과 북한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실례로 2006년 1월 19일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26] 서기국은 이른바 한총련 탄압을 규탄하는 보도 제915호를 발표하며, '한총련의 합법화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한바 있다. 또한 북한은 2003년

---

25) 한총련은 100만학도의 자주적 대중조직임을 내세우며 표면상 대표인 의장과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 및 중앙조직인 공개부서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학생운동의 원로원격(OB)인 '정책위'와 여기서 파견된 인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중앙집행위'와 '중앙상무집행위'라는 핵심지도부에서 조종하고 있다. 특히 정책위에는 학생운동출신의 주사파 핵심지하지도부 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정책위' 뒤에는 국내 '주사파 지하지도부'가 도사리고 있으며, 이를 움직이는 것은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이다. 바로 한총련의 최종배후세력은 북한 조선로동당인 것이다.

26) 조평통은 1961년 5월 31일 결성된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로 당시 4.19혁명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혼란에 편승하여 대남적화혁명노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화통일과 남북교류를 표방하며 제 정당 사회단체·각계인사들을 망라하여 급조된 대남통일전선의 전위기구이다. 이 단체의 기능과 임무는 ▲ 남북 대화업무 전담 ▲국내 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연방제 통일노선 선전 및 통일전선 형성 ▲한국내 국론분열 및 친북여론 조성을 위한 선전공세(예 : 조평통 서기국보도,성명, 백서,고발장, 공개질문장 발표, 국내 인사들에 대한 편지공세) 등이다. 특히 남북당국자간 회담시 조평통 간부들이 직접 회담 대표로 나서는 등, 남북회담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현재는 당 통일전선부 소속인데, 위원장은 공석이나 김정일이 관장하고 있고 부위원장은 강주일, 김광천, 림동욱, 송운숙, 안경호, 양형섭, 오익제, 전금진, 정준기 등 10여명이 맡고 있고, 서기국장는 안경호, 대변인은 박영수가 맡고 있다. 조직편제를 보면, 중앙위원회, 서기국과 산하에 조직부, 선전부, 회담부, 조사연구부, 총무부 및 자료종합실 등이 있다. 유동열, 북한의 대남전략기구의 실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4월25일 <로동신문> 논설 “한총련의 위업은 정당하다”를 통해 한총련 결성 10주년을 축하하고 한총련 활동을 정당시하며 고무한 바 있다.

> “**한총련**은 결성된 첫말부터 오늘까지 자주,민주,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벌여왔다. 그 나날에 **남조선의 사회적 진보와 조국통일운동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한총련의 자랑찬 투쟁로정은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사에서 자울수 없는 자욱을 남겼다 ... 오늘 한총련 앞에는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반미반전투쟁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전환을 이룩해야할 중대한 과제가 나서고 있다.... **한총련은 조직의 합법화를 실형하고 미제의 핵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다 ....**한총련의 위업은 정당**하며 그것은 온민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북한 로동신문, 2003년 4월 2일자 논설)

북한은 남북당국자회담시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총련의 합법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2003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시 북한은 우리측 대표단에게 ‘한총련의 합법화’를 ‘북남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중의 하나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을 주장한바 있다. 북한이 이렇게 한총련의 투쟁을 지지하며 선동하는 이유는 1964년 2월 27일 조선로동당 제4차 8기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이래 대남전략의 기조가 되고 있는 ‘3대(북한, 남한, 국제)혁명역량 강화노선’ 중 남한내부의 혁명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국제혁명역량의 퇴조와 함께, 북한내부의 극심한 경제난 등으로 인한 내부혁명역량의 침체 속에서 현실적으로 남한내부의 혁명역량 강화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총련과 같은 친북좌익세력의 준동은 북한으로서는 더없이 반갑고 고마운 행동인 것이다. 결국 북한이 유일하게 기대를 걸

고 있는 남한내부의 혁명역량 강화에 한총련은 충실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27]

이상에서 살펴 본 「한총련」의 사상노선, 투쟁노선, 조직노선을 종합해보면, 제15기 한총련은 이전의 한총련과 같이 북한당국의 제 노선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는 친북이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2003년 5월 13일 대법원은 한총련관련 판결(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에 대한 판결)에서 한총련이 연방제강령 삭제 등의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본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고무찬양,선전동조하는 이적단체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15기 한총련도 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28]

> "비록 남북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그 결과로써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평화와 화해를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하더라도 ... 중략... 지금의 현실로는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지였다는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등으로 **북한의 반국단체성이 소멸하였다고 볼수 없다**"(대법원 2003.5.13 판결, 2003.1.24 선고 2002도 2306 판결)

---

27) 현재 북한은 남한혁명의 주력군으로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및 진보적 지식인 등 4대 주력군을 편성하고 있는데, 바로 청년학생 그룹중 가장 변혁적이고 투쟁력이 강한 한총련을 고무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한총련을'남한혁명의 발파공'운운하며 추켜세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8) 대법원은 1998년 5월 15일 5기 한총련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래 11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 13일 대법원에서 10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한바 있다.

Ⅳ. 향후 전망 및 대응

1. 향후 전망

(1) 기 조

15기 한총련의 총노선을 분석해보면, 2007년에도 한총련은 궁극적 전략목표인 이른바 한국사회변혁 지향전략(한국 사회주의권력수립 실현)을 '민중민주주의 구현'으로 은익한 채,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전술적 변화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15기 한총련은 올해 정세를 전망하면서, "우리 민족과 미국의 최후 대결전에서 우리민족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가를 잘알고, 그 안목과 높이에서 2007년을 전망하고 만들어갈 결심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2007년에 우리민족과 미국의; 최후대결전 2차전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29] 특히 한총련은 2007년 대선(대통령선거)이 자주통일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우리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진보개력 평화세력의 대연합으로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낮은 단계 연방제 진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30] 이는 북한이 2007년 신년사에서 주장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2) 세부 전망

첫째, **대적관(對敵觀)** 한총련은 전략적으로 한국정부와 자본가를 '적

29) 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31-32면 한총련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2006.7.5)와 핵실험(10.9) 성공으로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전 1차전에서 승리하였다고 주장한다.

30) 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36면

(敵)'으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에도 계속 견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한국정부는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정권이기 때문이며, 본질적으로는 한총련의 이른바 한국사회변혁운동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관과 마찬가지로 전략속성상 타도대상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총련은 올해에도 현재의 유화적인 남북관계 상황이 단절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정책노선과 보조를 맞추며 노무현정부에 대한 타도투쟁을 노골화하지 않은채, 현정부의 시책에 대해 사안별로 비판하며 6.15 공동선언의 이행이란 명분 하에 친북(親北)연대를 계속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31]

둘째, **(사상관)** 한총련은 올해에도 '학우중심-민중중심의 단결사상' 또는 '자주사상'이라는 표현 하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상정하고, 이의 연장선에서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를 강조하여, 2007년 북한의 조국통일구호인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의 3대 과업수행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투쟁관)** 한총련은 올해 투쟁방향과 과제를 총노선에서 밝혔듯이 대선투쟁에 주력하고 6대 투쟁과제를 수행하는데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했듯이, 15기 한총련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자민통(자주-민주-통일)노선과 3대 과업(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 수행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총적목표와 투쟁기조를 설정하고 있다.

①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 ② 반수구,반한나라당투쟁 ③ 조국

31) 한총련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술적으로 현정부를 친북좌파 개혁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타도대 상이 아닌 견인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전략적으로 현정부를 타도대상으로 삼고 있다. -

통일, 6.15 공동선언 이행투쟁 ④ 교육투쟁 ⑤ 국가보안법 철폐,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⑥ 민중연대사업 등 6대 투쟁과제 등이다.

다섯째, **(대선투쟁)** 한총련은 2007년 대선(대통령선거)에 대응한 대대적인 대선투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총련 구체적인 대선투쟁 지침은 하달하지 않았으나, 기본방향은 제시된바 있다.

이의 방향은 북한의 대선투쟁 지침과 맥락을 같이한다. 북한은 이번 대선에서 이른바 **한국내 친북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선거구도를 **평화애호세력(=6.15지지세력, 친북진보개혁세력) 대 전쟁도발세력(=6.15반대세력, 친미보수우익세력**)으로 편성하고, 이른바 평화공세, 민족공세를 통해 국내 대선판도에 친북벨트를 구축하려는 공작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대 선거에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평화 대 전쟁'으로 대치한 것인데, 『한나라당 집권하면 전쟁난다』라는 구호에서 상징적으로 파악할수 있다. 이는 친북정권이 창출되지 않으면 전쟁하겠다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공갈, 협박으로 북한 스스로가 평화애호세력이 아닌 전쟁도발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북한이 하달한 주요 선거투쟁 구호를 보면 "진보개혁세력의 대연합으로 친미보수의 대연합을 타승하자", " 오늘의 투쟁은 6.15세력 대 반6.15세력간의 첨예한 싸움이다", " 각계층 민중은 단결의 위력으로 친미보수세력의 전쟁도발 흉계를 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자", "이 땅에 미국군대가 없고 한나라당이 없는 평화로운 새 정치풍토를 마련하자!" 등이다. 여기서 보듯이 금번 북한의 대선투쟁의 핵심선동 메뉴는 **'전쟁세력=한나라당=친미보수우익세력=반6.15세력'의 척결 및 타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아래의 한총련의 대선관련 대응에서도 확인할 수있다.

"2007년 대선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과 마지막 남은 명줄을 지키기 위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수구세력들과의 판갈이 대결전**이 펼쳐지는 해입니다. 승리하면 자주통일로 급속히 전진하는 것이요, 패배하면 파쇼의 암흑기로 회귀요, 핵참화의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민주, 통일의 선봉장 한총련이 앞장서서 우리 민족의 승리에 대한 낙관과 신심을 드높이며 **대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고 자주통일의 전성기를 펼쳐 나갑시다"(제15기 한총련 총노선, 2007.2. 2면)

" **대선투쟁 승리를 위한 학내 일상 사업** -주 1회 **반미반전 반한나라당 마당사**업(마당사업의 제목은 창조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한나라당은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고, 미국이 하는 행동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추종하기 때문에 미국과 한나라당 반대 내용을 결합시켜서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의 과거를 알려 드립니다' 등의 종자를 잘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 반미내용을 더 부각시키거나 반한나라당의 내용을 더 부각시켜서 하는 식으로 진행합시다. ① 의의 - 학내에서 꾸준한 반미반전과 반한나라당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방도입니다.: **올해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기도를 파탄**내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으로 진보개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층의 여론을 형성해 내는 것이 중요하고 하여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거점인 대학사회 안에서 이러한 흐름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47-48면)

여섯째, **(투쟁유형)** 한총련은 올해에도 남북화해 분위기에 최대한 편승하여 특별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는한 대규모 폭력시위를 자제하고 합법, 반(半)합법 영역에서의 투쟁에 주력할 것이다.[32] 다만 현정권이 한총련 합법화 요구를 거부할 때 전면적인 비합법투쟁을 전개하며 합

32) 향후 남북관계의 악화나 활성화 국면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한총련은 북한과의 연대투쟁을, 전자의 상황 전개시 비합법 연대투쟁으로 후자의 상황전개시 합법·반(反)합법영역의 연대투쟁으로 전환구사될 것이다.

법-비합법투쟁을 배합 할것으로 보인디. 이는 향후 한총련 활동의 대중성 확보원 및 역량과시 차원에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이나 반미투쟁시 제한적인 게릴라투쟁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33]

일곱째,**(연북투쟁)** 한총련은 올해에도 6.15 이후 조성된 남북유화분위기에 편승하여 연공연북활동의 일환으로 남북학생교류를 위한 방북추진 등 이른바 '자주교류투쟁'을 강화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북한과 연대하여 ' 남북대학생 통일축전, 615 민족통일대축전', '815 민족공동행사'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자주교류 투쟁은 한총련 대표의 밀입북 등 비합법 방북투쟁을 지양하고 정부승인 하에 합법적인 방북형식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나, 당국이 불허시 불법입북투쟁을 전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덟째, **(조직강화)** 한총련은 1996년 한총련 연세대 난동사태 이후 쇠락한 한총련의 학생운동에 대한 지도권을 복원시키기 위해 '학생운동의 단결과 대중운동의 활성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전 한총련이 그동안 추진해온 '새로운 학생운동을 구현하는 새조직 건설을 위한 주체역량의 강화'차원에서 「한국민주대학생연합」(약칭: 민학련) 등의 새조직 건설을 본격 추진하기 보다는, 현 한총련체제를 유지하며 조직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대련과 같은 제2의 학생운동조직이 한총련의 위상을 침식하는데 대한 경계감보다는 이미 친 한총련세력화된 한대련 등의 학생운동권과의 연대투쟁에 주력할 것이다. [34]

33) 이러한 합법투쟁 양상은 표면상 '한총련 역량의 퇴보현상'으로 일부 파악될수 있으나, 실제로는 합법투쟁 공간이 열려있는 있는 현 정치상황 하에서 구태어 한총련이 일반 학생 및 대중의 정서와 괴리된 불법폭력투쟁을 전개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전술적 조치임을 지적한다.

34) 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 2007.2.10, 57-59면, '단일한 새학생운동 전국조직 건

그 이유는 15기 한총련이 이전 한총련과 같이 기본적으로 새로운 학생운동 조직건설을 지향은 하지만, 현실정에서 중요한 것은 조직해체보다는 새조직 건설을 위한 역량강화가 시급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학생조직의 건설을 지향하기 위해 먼저, 학생운동의 조직·투쟁역량 즉 혁명역량의 강화와 한총련의 합법화를 달성하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5기 한총련은 골간체제 강화차원에서 '대표자중심주의 구축', '대의체계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07년 전국대학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보면, 한총련내에 세력판도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NL자주파내 자주파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기 이래 지속된 NL자주계열과 비주류인 NL혁신계열(신자주)계열의 내분은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에도 현재의 남북유화국면이 지속되는한 NL자주파(전폭적 북한추종파)가 입지가 강화되고 반면 NL비자주파(선택적 북한추종파)의 입지는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총련 내부의 NL자주파와 신자주파(혁신파)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정치노선의 갈등이 아닌 한총련 내 북한 추종세력들간의 충성다툼과 주도권 다툼이기 때문에 친북편향의 한총련 활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한총련 합법화)** 한총련은 이미 조직 합법화를 달성하기 위해 9-11기 시 연방제통일 강령과 친북시비를 야기시킬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여성·환경조항을 신설하는 등 개량주의적인 면모를 보여 준바 있으나, 제14기때부터는 또다시 '연방제통일 건설'을 노골적으로 제기하는 등 강공으로 나가고 있다. 15기 한총련에서도 6.15 공동선언을 앞세워 낮은단계 연방제를 내세우면서도 한총련의 이적규정 척결과 국가보안법 철폐 특별결의문을 발표하며, 매시기 합법화 지침을 하달하며

설'에 대해선 11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자료집, 64-68면, 동아대 36대 총학생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교양자료집, 2003) 참조.

공세적인 합법화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해 합법영역에서 국제단체와 국제NGO 등과의 연대투쟁을 지속전개할 것을 보인다. 예를 들면, 한총련 합법화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면서, 국제NGO 등과의 연대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최대한 역이용하여 한총련의 합법화를 위해 총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열째, **(민중연대)** 한총련은 제도권 및 재야권에 학생세력의 영향력를 강화하기 위한 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며, 한총련의 합법화를 통한 정치적 지분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총련은 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재야단체들과의 연대연합전선 구축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총련의 연대연합운동은 북한의 통일전선형성 원칙에 입각해서 평가해 보건데, 하층 통일전선의 차원이며 낮은 형태의 부분적 연합전선체 형성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높은 형태의 전면적 연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35] 한총련이 추진하는 연대연합운동의 최소강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관철과 민족민주진영의 총단결'이 될 것이다. 한총련의 연대연합운동의 구심점은 정치영역은 '민주노동당', 통일운동영역은 범민련 지도하의 '통일연대', 민중운동의 영역은 '전국민중연대' 등이 될 것이다.

끝으로, 한총련은 인터넷공간에서 사이버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1기 한총련 시절 '정보화 핵심 1만명 양병론'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정보화사업지원단 구성, 한총련 홈페이지 포탈화 전략을 구현한 이래 사이버투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공간에서의 한총련은 사이버학생회 가동 등과 더불어 기존의 사이버통신, 선동 단계에서 점차 정부당국과 국가공용망에 대한 테러, 북한과

35) 학생운동권의 뿌리깊은 계파(NL,PD,트로츠키파 등)간 반목, 헤게모니장악을 위한 갈등, 조직내 지분확보 진통 등을 고려할 때, 학생운동권 전계파가 참가하는 높은 형태의 전면적 연합체 구축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의 사이버교신 등의 사이버투쟁 양상이 더욱 정교한 방법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36]

2. 대 책[37]

한총련의 문제는 주지하듯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20여년의 역사를 가진 뿌리깊은 '한국현대사의 불행'의 하나로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님을 지적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3요소(사상,조직,자금)차단과 한총련 세력의 확산요인 분석을 통한 총체적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38]

1. 범정부차원의 대책

(1) 기본적 접근방안

한총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운동의 3대 요소라는 '사상, 조직, 자금' 즉 한총련의 기반인 '사상의 와해'- '조직의 무력화'- '자금원의 차단'이 연계적으로 이루어 져야만 할 것이다.

---

36) 이에 대해서는 유동열, 사이버상의 국가안보위해활동의 현황과 대책(2006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참조

37) 이부분은 유동열, 제14한총련 활동노선 및 대책(2006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내용을 전면 일부 수정하여 인용한다. 그 이유는 한총련 대책이 크게 이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38) 유동열, 「한국좌익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제」244-269면,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및 대응책, 경찰수사보안연구소 보안수사지휘과정 교재(2002), 유동열, 한총련의 사상 조직 자금, 「월간 북한 통권307호」(1997), 68-75면, 유동열, 국내 학생운동권의 현황 및 대처방안, 전국대학학생과장협의회 하계세미나 발표논문(2001),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황, 법무연수원 공안요원 연수자료집(2002) 참조.

첫째, 사상의 와해란 친북좌익화한 한총련의 정신적 토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한총련 지도사상의 뇌수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체사상 을 기반으로 한총련의 지지세력을 확산하는 정교한 의식화 공작을 차단하는 핵심대책이다. 따라서 한총련 대책에는 사상적 토대를 무력화시킬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른바 사람중심, 민중중심, 학우중심의 사상이라는 주체사상을 무력화하지 않고서는 NL 주사파 주도의 한총련을 근원적으로 와해시킬 수 없음을 지적한다.

둘째, 조직의 무력화란 현재 한국학생운동을 공개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한총련 조직자체를 해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총련을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지하 지도부'를 무력화시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역시 한총련의 행동력을 무력화하는 핵심 사안으로 조직력과 투쟁력을 차단하는 방안이다.

실제 각 대학 학생회에는 <자주대오>(민족해방 활동가 자주대오)라는 주사파 지하지도부가 있으며, 한총련에는 주사파 학생운동의 원로원격인 '비선분파'(정책위원회 등)가 북한 대남공작지도부의 지령을 받아 한총련의 원격조종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조직 와해와 함께 지하지도부의 와해가 필수적이다. 더나가 국내 주사파 지하지도부를 조종하는 북한의 대남공작 채널을 차단해 할 것이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한총력세력을 부추키고 있는 각계각층의 불순 정치세력의 공작도 차단해야 한다.

세째, 자금원의 차단이란 한총련의 실천투쟁력을 직접 뒷받침해주는 물적 토대를 와해시키는 것으로, 운동의 동력이 되는 자금을 차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총련의 자금원인 회비, 특별회비(각 대학 총학생회 분담금), 자체 수익사업, 불순세력의 찬조금 및 기타 수입 등을 체계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한총련 중앙조직의 1년 예산은 5억을 상회하며 학생들이 직접 부담하는 출범식 등 행사 참가비용을 계

상하면 10억원이 넘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산하 각 지역총련, 전국대학의 총학생회의 예산을 포함하면 150억 여원의 엄청난 예산이 학생운동에 소요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회비의 분리징수 등 좀 더 세밀한 재정자금차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망된다.

(2) 실천방안

첫째, 우리사회에서 한총련과 같은 친북좌파세력이 뿌리를 내릴수 있었던 근원적 요인는 바로 우리체제 내부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상존하는 부조리 및 취약점이라 할 수 있다.

한총련은 그들의 혁명(한국사회변혁운동이라고 표현) 논리전개의 출발점을 한국사회과 현정부에 대한 왜곡된 평가에 두고 있다. 즉 한국사회를 미제의 식민지사회로 현정권을 친미사대매국정권, 국민독재정권 등으로 왜곡규정하고, 현정권이 미제를 등에 업고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순투성이의 사회로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의 일부 문제점을 체제 전체의 모습인양 과대왜곡 부각시켜, 사회주의혁명만이 이러한 우리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총련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출발점은 바로 우리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취약점,부조리 및 모순을 극소화시켜 정의롭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소외세력 및 체제불만세력을 견인하여 근원적으로 좌익세력들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기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한총련 세력의 발호를 제어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물론 이는 문제의 성격상 단기간 내에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인바, 중장기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올바른 대(對) 한총련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 우리사회 일각에서 한총련 세력을 애국애족세력이니 민족민주세력이니 진보세력이니 하면서 옹호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세력은 애국애족세력이 아닌 바로 친북이적세력임을 직시해야 한다. 한총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먼저 한총련의 실체를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對)한총련 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

▲ 정부당국의 최고위층에서부터 친북이적활동을 행하는 한총련 세력에 대한 확고한 척결의지가 지속적으로 견지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공안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공해준다.

▲ 학생들에게 올바른 이데올로기교육과 한총련에 대한 실상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 스스로 친북좌익논리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대응력을 지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교한 한총련 핵심세력의 의식화공작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름길이다. 현재 대학당국의 이념교육으로는 친북의식화를 막을수 없다.

▲ 또한 북한 및 공산주의관련 이념서적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과 지속적 단속이 필요하다. 좌익이념에 대한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비판응력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념서적을 접하게 되면,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이를 세상에 내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이념관련서적의 출판시 책 머리나 말미에 이들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설득력있는 비판과 평가를 자율적으로 수록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 한총련이 주도하는 불법 가두시위, 집회, 불법 노사분규, 화염병투척, 투석, 공공기관 점거・방화・공공기물 파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공권력의 단호한 행사와 법집행이 요망된다.

▲ 정치적 결단에 의한 한총련 사범의 대폭 사면·석방등의 조치는 국민화합과 순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환영해야 될일이나, 여기에는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총련 사범들이 진정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실질적인 사상적인 전환이나 건전한 사회활동 영위에 대한 판단이 섰을 때만 법의 관용이 필요한 것이지, 매년 되풀이되는 정례적인 사면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반국가활동을 하고서는 우리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한총련 사범에 대한 올바른 교정정책이 요구된다. 교도소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장소가 아니라, 좌익학습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사회주의혁명인자를 발굴,양성하는 의식화 재교육장소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네째, 한총련이 발호하는 이유중 하나는 대학당국의 잘못된 학사운영 및 관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총련 문제를 학원 외적 문제로 치부하고 나몰나라 하는 식의 대학당국의 행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

한총련의 핵심세력을 학원내에서 척결하기 위해 대학당국의 합리적인 학사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학내 취약점을 극소화하고, 운동권학생에 대한 성적관리 철저와 이들의 활동에 대한 대학당국의 통제권이 회복되어야 하며, 교수들의 적극적인 학생지도활동이 요망된다. 이와 함께 대학당국은 건전한 학생활동을 적극 보호육성해주고 그들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혁명기지화하고 있는 불법서클 등 활동공간을 패쇄하여야 하며, 한총련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학생운영기금 등에 대한 자율적인 감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건전한 학생운동의 정착을 위해 시민사회, 언론 및 정치권의 지원과 노력이 절실하다. 친북이적활동을 행하는 한총련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건강한 대학문화와 학생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및 특히 언론은 친북좌익편향적 한총련의 실체와 해악성을 널리 알리고 대학생들의 건전한 자율적 자치활동이 정상적 궤도에서 움직이도록 협조, 지원해야 한다.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시민사회에서 학생운동이 맑스레닌주의나 주체사상과 같이 허구적 이념과 폭력성에 빠지지 않도록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높일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시켜 견인해야 한다[39]

끝으로, 한총련에 대응한 건전한 학생세력의 구축이 필요하다. 19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비호세력을 부식시켜온 한총련의 문제를 정부의 공권력에만 의지하여 해결하기에는 이제 너무 벅차다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한총련의 핵심세력이 전체 학생수에 비추어 아직 소수이라고 하지만 이제 더이상 국민이나 일반 학생의 무관심속에 계속 방치할 순 없는 것이다.[40]

따라서 이제 한총련 문제는 단순히 학원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임을 자각하고 공권력에만 의지하지 말고, 모든 국민이 나서 가정, 학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한총련에 대응한 건전한 카운터(counter: 대항) 세력을 구축하여 직접 대응해야 한다.

---

39) 배규환, 학생운동과 대학생자치활동(서울: 나남출판, 1999), 302면

40) 그 이유는 다음의 역사적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는 바로 1917년 인류 최초로 사회주의혁명을 성사시켰던 러시아에서 당시 혁명에 불을 당긴 인원은 당시 절대 짜르체제에 항거하여 노동자, 농민 등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했던 100여명도 안되는 레닌이 이끄는 극소수의 볼세비키 핵심정예요원이였다는 사실이다. 행동하는 소수의 좌익에 침묵하는 다수는 항상 이끌려 다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유동열,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 378면

2. 경찰(보안경찰)차원의 대책

첫째, 보안경찰은 그 기능상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해야 하며,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보안경찰은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체제수호의 마지막 보루라는 냉철한 시대인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보안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정치논리나 시대풍조에 휘둘릴 때 우리의 안보활동은 커다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결국 이는 국가안보대응역량의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둘째, 한총련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및 국내 안보위해권의 전략전술과 활동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한총련의 활동이 독자적이며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및 이를 추종하는 국내 친북안보위해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매년 한총련의 활동방향은 북한 「반제민전」[41]의 대남투쟁지령문인 '신년메세지'의 투쟁지침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개된다.

셋째, 한총련이 발호하는 원인중 하나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남한적화혁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북한의 정교한 대남공작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간첩공작을 차단하고 한총련의 지도채널인 '평양방송'(대남전용방송)과 '구국전선'과 같은 친북인터넷사이트의 차단 등과 같이, 북한의 대남공작과 한총련의 연계공작을 차단, 분쇄시키기 위한 보안활동이 요망된다. 이를 위해 보안경찰의 대공대응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41)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은 북한 대남공작부서중 하나인 「통일전선부」소속의 대남혁명전위대로 한민전(한국민족민주전선, 구 통일혁명당)의 후신인데, 2005년 3월 23일 반제민전으로 개칭한바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유동열, "반제민전 출범의 대남전략적 의의", 월간 북한 2005년 6월호(서울: 북한연구소, 2005) 참조.

또한 6.15 공동선언 이후 합법-비합법적 공간을 활용하여 전개하는 한총련의 이른바 '남북학생 자주교류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남북교류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총련의 안보위해활동에 대한 보안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원담당 전문 공안수사요원을 양성하고 정예화시켜야 한다. 즉 한총련의 안보위해활동 패턴을 예측하고 전망하는 사법처리하는 한총련 관련 전문분석관 및 전문수사관의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경찰수사보안연수소 보안교육과정 내에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관련 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전문 학원수사과정 신설과 교육, 관련 보안교육교재의 개발과 우수 강사요원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총련의 안보위해활동에 대한 보안수사의 대응역량을 쇄신하기 위해, 기존 보안수사시스템과 행태를 제로베이스(zero-bace)에서 재평가하고 이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보안수사관행의 문제점 도출, 보안정보망의 재점검, 관련 보안정보수집 채널의 다양화, 사이버 안보위해망 분석, 보안수사 저해요인의 추출과 대응법, 한총련 활동의 체크리스트(check-list, 점검목록) 구축, 효율적인 보안수사기법(수사, 심문 등) 개발, 동기부여책 등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총련에 대한 유관기관(교육부, 국정원, 검찰 등)간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상시 유지가 필요하며, 더나가 세계각국의 보안수사기관과의 교류도 모색해야 한다. 국정원 등 타 안보수사 교육기관과의 교류 및 미국 DHS(국토안보부), FBI(연방수사국) 등 해외정보수사기관내 교류 및 교육파견을 추진하여 외국의 반국가적인 학생운동에 대한 대처책 등을 연구하여 이들 나라의 경험을 우리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한총련의 안보위해활동 등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보안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보안친화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보안친화활동을 위해 대국민, 대언론, 대여론선동층에 대해 열린자세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쌍방향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보안환류(feed-back)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의 연장선에서 사회 각계의 전문가그룹을 활용하기 위해, 예를 들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회'(가칭)의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법과 원칙 및 인권을 중시하는 보안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총련이 전개하는 전략전술과 활동상을 면밀히 추적하고, 이의 위법성을 입증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국가안보위해 사범의 척결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인권시비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과학수사, 기획수사를 통해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권중시풍조를 악용하여 정당한 보안수사를 방해하는 안보위해사범들의 '역(逆)인권전술'에 대항한 '대항 인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42] 그 어느때 보다 보안경찰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보안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아홉째, 예방위주의 보안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총련이 주도한 안보위해사건이 발생한 후 이를 수습하고 사법처리하는 '후(後) 대응적' 보

42) **대항인권매뉴얼**이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장책'을 악용하여, 피의자들이 수사를 지능적으로 방해하고 더나가 수사관들의 인권남용을 유발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반 대응지침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일부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인권보장 노력에 대항하여 교묘히 인권남용을 유발시킨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항인권'이라 개념화함.

안활동보다는, 사전에 한총련이 전개하는 안보위해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점검하면서 한총련의 안보위해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다양한 순화와 압박전술을 배합하면서 한총련 주도세력에 대한 심리적 위축을 주어 불법 행동화를 방지하는 기법도 고려해야 한다.

열째, 현시기와 같은 사상적 혼돈국면에서는 한총련의 정교한 선전선동 공세에 대응하여 일종의 사상전(思想戰)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국가보안법의 입지가 어려워져 한총련 등 안보위해세력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원활히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념투쟁인 '사상전'을 통한 한총련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한총련의 주장은 대부분 북한이 전개하는 대남선전선동을 수용한 것인바, 이들 선동에 대해 사안별로 설득력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여 이의 부당성과 허구성을 규명하고, 선량한 국민들이 북한이나 한총련과 같은 국내 안보위해세력의 선전선동 공세에 말려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보안경찰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 재정립과 역량비축을 통한 혁신의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43] 보안경찰은 현시점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겸허하게 인정, 반성하고 새로운 보안환경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의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면밀한 보안경찰 업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과거의 부적절한 보안경찰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과학수사의 정착, 보안수사의 정예화, 보안정보역량 강화 등을 통해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존경받는 '국민의 보안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43) 유동열,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경찰의 혁신방향과 과제", 보안경찰 혁신공청회 발제문(경찰청, 2005.7.6) 참조

참 고 문 헌

국가안전기획부, 한총련의 실체 제1기-제5기(서울:국가안전기획부, 1994-98)

경찰청, 좌익운동권 변천사(서울: 경찰청,199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

김승호, 유동열, “한총련의 투쟁과 전망”, 제25집(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서울: 도서출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2)

박홍수, “한국학생운동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세미나자료(1991)

범청학련 남측본부, 제16기 범청학련 남측본부 총노선(2007.5)

배규환, 학생운동과 대학생자치활동 (서울: 나남, 1999)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서울: 북한연구소, 1998)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2-1992 (서울: 북한연구소, 1993)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사상연구소,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혁명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유동열, “좌익혁명세력의 전략전술과 투쟁양상”(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1)

-----, “전대협 신년서한 분석”, 공안연구 제12집(서울: 공안문제연구

소, 1991)
-----, “국내 좌익운동권의 계파별실상분석”,제13집(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1)
-----, “좌익혁명세력의 확산요인과 대책”, 제16집(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1)
---- , 한국좌익학생운동의 이론과 실제(서울: 민족정론사, 1995)
-----,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현실(다나, 1996)
-----, “한총련 대해부”, 월간 민족정론 1996년 10월호(서울: 민족정론사, 1996)
---- , “한총련의 조직, 활동,배경”, 성우회 안보학술세미나(1996.10.18)]
---- , “북한의 대남전략과 한총련”, 북한연구소 학술회의(1996.11.6)
---- , “북한과 연계된 국내좌익세력에 대한 대책”, 공안문제연구소 제9차 공안세미나 발표논문(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7)
---- , “한총련의 사상, 조직, 자금”, 월간 북한 1997년 7월호(서울: 북한연구소, 1997)
---- , “한총련의 발호원인과 근본대책”, 월간 민족정론 1997년 7월호(서울:민족정론사, 1997)
----, “최근 학생운동권의 조직재편동향”, 공안연구 52집(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8)
----, “ 새정부 출범이후 국내 좌파세력의 활동실태 및 향후 전망”, 민주이념 제2호(서울: 대검찰청 민주이념연구소, 1998)
----, “2000년 국내 학생운동권 현황분석”, 공안연구 통권61집 (서울: 공안문제연구소, 2000)
----, “2001년 학생운동권의 현황 및 투쟁실상분석”, 공안연구 68집

(서울: 공안문제연구소, 2001)
----, “국내 학생운동권의 현황 및 대처방안”, 전국대학학생과장협의회 하계세미나 발표논문(2001)
----, “ 국내 좌파운동권의 조직실상 및 활동전망”, 공안연구 제56집(서울: 공안문제연구소, 1999)
----, “한국좌익운동의 역사와 실태”, 법무연수원 교재(서울: 법무연수원, 2002)
----, “한총련의 조직실체와 향후 전망”, 법무부 공안세미나 발표논문(2002.11)
----, “10기 한총련의 노선평가 및 활동전망” 공안연구 74집(서울:공안문제연구소, 2002)
----, “11기 한총련의 조직실체와 대응책” 공안연구 78집(서울:공안문제연구소, 2003)
----, “제12기 한총련의 활동노선 및 전망”, 공안연구 제83집(서울: 공안문제연구소, 2004)
----, 한총련 등 좌익세력의 실태, 대통령경호실 강의안(2004.5.24)
----, 한국좌익운동사, 경찰수사보안연수소 보안수사과정교재(서울; 경찰수사보안연수소, 2005)
-----, “보안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경찰의 혁신방향과 과제”, 보안경찰 혁신공청회 발제문(서울: 경찰청, 2005.7.6)
----, 국내 안보위해운동의 현황과 대책, 2005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비공개)
----, 북한의 대남전략기구의 실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제14기 한총련노선분석과 대책, 2006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비공개)

----, 국가안보위해세력의 실체(서울: 경찰수사연수원, 보안교재, 2007)

----, 북한의 대남전략과 국내 안보위해세력(서울: 경찰수사연수원 보안교재, 2007)

윤경철, 일본학생운동연구;역사와 교훈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최문성, "한국학생운동연구" 한국정치의 현대적 조명(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한완상, "시민, 학생운동 그리고 경찰", 치안연구소 학술세미나발표문(1996)

한총련, 중앙위 총노선(2007)

-----, 한총련 의장토론제안서(2007)

-----, 제15기 한총련 총노선수립을 위한 토론제안서(2007.2.2)

-----, 제15기 한총련 총노선 초안(2007.2)

-----, 제15기 한총련 정기대의원대회자료집(2007.2,10)

-----, 제15기 한총련 임시중앙위원회 특별결의문(2007.3.10)

-----, 1-2월 집행대책, 3-4월 사업계획 등 **외 한총련 관련문건 80여종**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책임연구보고서 2007-24

제15기 한총련의 총노선분석

2007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 안 정 책 연 구 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